"거리두기 격상 고민…경각심 가져야"

집단감염·n차 전파 동시다발…전남 동부권 비상 감염원·전파경로 불투명 수두룩···역학조사 안간힘

는 없는 상태다.

이에 대해 김 지사는 "현재 상황을 엄

중히 인식해 도 차원서 총력 대응하고 있

다"며 "최근 확진자 발생지역에 '역학조

사 공동협력 T/F팀'운영과 함께 중앙

질병관리청 적극대응팀의 지원을 받아 감

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"최근감염 경 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많아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다"며 "도민 모두 경각심 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줄 것"을 호소했

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를 통해 "지난 7일부터 10일간 여수·순천·광양 등 동부권과 화순 등에 서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"며 "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"고 말

실제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순천시에 선 7일부터 총 20명이 확진됐다. 신한은 행지점에서 시작, 은행직원과 가족, 방문 객으로 전파돼 9명이 양성 판정됐으며, 아구마을 식당과 워터피아 헬스장·사우 나 등에서 11명이 추가됐다.

전남도는 순천시 사우나 헬스장 등 실 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 하고 영업제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
광양시의 경우 성광기업 근무 여성 확 진자에 의해 동료·가족이 감염됐으며, 이 어 쇼핑센터 종사자, 관련기업 및 퀵서비 스 종사자, 식당·카페·미용실 등 n차 감 염이 이뤄져 총 37명이 확진됐다.

화순군에선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가 최초 확진된 후 배우자·자녀·직장동 료 등 4명이 확진, 지금까지 총 281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

다.

사회적 거리두기가 1.5단계로 격상된 순천·광양·여수시에 대해선 "사회적 거 리두기를 강화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 관을 권고하고, 모임·행사 시참여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권장한다"며 "50㎡이상 식당·카페에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 달라"고 당부했다. 특히 "최근 확진사 례의 공통점은 의심증상을 감기라고 생각 해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추가 확산이 되

염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"고 설명했

고 있다"며 "기침·발열·인후통·근육통 등 증상 시 무료인 진단검사를 즉시 받아 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김 지사는 "n차 감염 우려에 따라 도민 스스로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하고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"며 "내년 1월까지 연말 송년회 등 사적 모임 과 회식을 자제하고, 기업체·사업장은 직 원 중 감기증상 시 유급휴가를 실시해 이 상 유무를 확인토록 협조해달라"고 요청 /길용현 기자



농산물 꾸러미·김장김치 나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농협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개최된 '농산물 꾸러미 및 김장김치 나눔'김장 담그기 시연장에서 참석자들과 김장을 담그고 있다.

이용빈, '고민택시' 타고 광주 청년들 어려움 공유

취업난·생활고 등 청취…"제도적 지원 절실"

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 빈(광주 광산갑) 의원은 '사서삼광' (4일은 서울에서, 3일은 광산에서) 일환으로 광주청년정책네크워크(이 하 광주청년넷)가 주관한 '광주청년 고민택시'(이하고민택시)에 참여했

이 의원은 지난 15일 아모틱협동조 합 추민승 이사장, 협동조합 놀자 강 한솔이사장과함께 '고민택시'로광 산지역 청년 활동공간 등을 돌아보며 지역청년들의 고민과 이슈 등을 얘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.

이 의원과 동승한 광주청년넷 추민 승·강한솔 운영위원은 고민택시에 신 청한 청년들이 겪는 코로나 블루를 전 했다.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 사정으로합격이취소된사연,아르바 이트도 경쟁률이 높아 일자리 찾기 어 려운 사연, 코로나로 거의 집에서 생 활하는데 이마저도 월세가 올라 답답 하다는 사연 등 지역청년의 취업난과 생활고 등을 들려줬다.

추민승운영위원은 "코로나19로지 역청년들의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져 알바·취업 등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"이라며 "생계부담 은 월세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일상생 활을 위협해 무기력증과 정서불안까 지 이어지고 있다"고 말했다. 이어



져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년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 적 투자가 많아

이 의원은 "고민택시를 타며 도서 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현 실부터 기존 농업방식을 바꿔 다양한 체험을 기획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가는 '시골과채소' 의청년농부,참신 한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자신의 콘텐 츠를 만들었지만 코로나 불황을 겪는 청년상인 일터를 돌아봤다"면서 "기 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지치고 쓰러지 지 않게 기댈 언덕이 되면서 '실패해 도 괜찮아', '다시 일어설 수 있어'라 며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 성할 책임이 있다"고 말했다.

이 의원은 "의제발굴부터 정책 제 안 모니터링 등 프로세스에서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강화하고, 이에 따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"며 "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인생 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 화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매진하겠 다"고 덧붙였다. /서울=강병운 기자

"독립·민주·보훈 업무분리…합당한 보훈정책 필요"

유공자 7개 단체.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규탄 천막농성

광복회와 4·19혁명, 5·18민주화운동 등 7개 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국방위 원회의 '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'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천 막농성에 들어갔다.

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에서 국방위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 하고, 운영위로 넘긴데 대한 반발에서 이 뤄진 것이다.

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되면 즉 시 효력을 발휘해 보훈처가 국방위로 넘 어가게 된다.

이들 7개 단체회원들은 "군홧발로 짓 밟힌 우리 단체가 독립·민주·보훈 업무 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방위로 들어간

다는 것은 우리를 또다시 짓밟겠다는 발 상이며,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"이라 고 강력 반발했다.

지금도 보훈업무가 호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국방위 소관으로 넘어가면 호국단체 위상만 높아 지고, 독립 · 민주 유공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다.

독립・민주 유공자 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"그동안 보이지 않게 차별받고 소외 받아온 독립 · 민주 유공자 단체는 이번 불 미스런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민주·보훈 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"고 밝혔 /서울=강병운 기자

제 정기 브리핑

"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기"

강은미, 오늘 문제실태·대안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

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복수노조 교섭단체 단일화제 도 도입 10년 문제실태와 대안 모색을 위 한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.

민주노총은 ▲위헌소송 ▲침해유형별 사레조사 결과 ▲대안입법 방향 모색 세 미나 등 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진 행돼온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 기 및 대안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.



할 방침이다.

강의원은이같은 성과를종합해도입 10년을 경과하고 있는현행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문제 점과 폐기 필요성 및대안입법방향에 대해발제하고토론 /서울=강병운 기자

광산구의회, '갑질' 물의 의원 제명 추진

윤리특위, 조상현 의원 제명안 만장일치 채택

광주 광산구의회가 상습적인 갑질로 물 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

16일 광산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무소속 조상현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

조 의원 제명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.

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 의원은 의 원직을 상실한다.

재선인 조 의원은 갑질 문제로 30일 출 석정지 등 세 차례 의회 차원의 징계 처분 을 받았다.

광산구의회 윤리특위는 조의원의 갑질 문제가 고질적인 만큼 최고 수위의 징계 인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조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

역본부가 최근 시행한 지방의회 관련 설 문조사에서 실명으로 갑질행위를 지적받 으면서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.

공무원노조는 이권개입, 폭언과 고압 적인 태도, 무리한 요구 등 조 의원의 갑 질행위를 지적했다.

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 치민주연합소속으로 2014년 광산구의회 에 입성해 초선 때부터 갑질 논란을 일으

초선시절 광산구 6급 이하 공무원 수백 명이 특단의 조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.

재선 후에도 같은 논란을 반복하자 지 난해 3월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.

/윤영봉 기자

